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5891
----------	------

제출연월일 : 2024. 11. 2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임원의 부재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도록 하며,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이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6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선정절차,”를 “임기, 선정절차 및”으로 한다.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4.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3조제5항 중 “제41조제5항제2호”를 “제41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6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열람·복사”를 “열람·복사(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5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이 조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만 해당한다)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영상자료(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만 해당한다)를 인계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제140조제2항제4호 중 “제125조제2항”을 “제125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 ④ (생략)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 -----. ----- ----- ----- ----- ----- -----.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u>6개월</u>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1. ----- ----- ----- ----- <u>2개월</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u>
<u><신 설></u>	4. <u>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 ④ (생략)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

⑥ -----
--- 임기, 선정절차 및 ---

---.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1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제44조(총회의 소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개월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신 설>

--.

②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이 조 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만 해당한다)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제3항

-----.

제138조(벌칙)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

<p>② (생략)</p> <p>제140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의2. (생략)</p> <p>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p> <p>③ (생략)</p>	<p><u>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녹음·영상자료(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만 해당한다)를 인계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의2. (현행과 같음)</p> <p>4. 제125조제3항----- -----</p> <p>③ (현행과 같음)</p>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124조제7항 (관련 자료의 공개 등)	<div>○ 정비사업의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서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24조제1항),</div> <div>○ 일부 지자체에서 조합의 자료공개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통합공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용해 자료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조합원 알권리의 체계적 보장을 제고할 수 있도록,</div> <div>< 시·도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div> <table><tr><th>서울</th><th>부산</th><th>인천</th><th>대전</th><th>광주</th><th>경기</th><th>대구</th><th>울산</th><th>세종</th></tr><tr><td>운영</td><td>운영</td><td>운영</td><td>운영</td><td>운영</td><td>'25년 예정</td><td>미운영</td><td>미운영</td><td>미운영</td></tr><tr><th>강원</th><th>충북</th><th>충남</th><th>전북</th><th>전남</th><th>경북</th><th>경남</th><th>제주</th><td></td></tr><tr><td>미운영</td><td>미운영</td><td>미운영</td><td>미운영</td><td>미운영</td><td>미운영</td><td>미운영</td><td>미운영</td><td></td></tr></table> <div>-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div>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대구	울산	세종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25년 예정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대구	울산	세종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25년 예정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124조제7항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해당 조항은 지자체가 관할 내 정비사업을 관리함에 있어, 개별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이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안의 내용이 시스템 구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자체별로 사업 여건이 상이하여 시스템의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이상훈	김용선	박용선	김헌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상훈	044-201-3390	flyable03@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